■민족문화연구 제89호(2020.11.30.),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367-400.
http://doi.org/10.17948/kcs.2020..89.367

1930년대 전문박물관 등장과 일제의 식민정책 변화

김현정(金賢晶)*

목 차

1. 머리말
2.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총독 부임과 전문박물관의 등장
3. 전문박물관 설립의 특징
4. 1930년대 전문박물관 현상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일제가 조선강점 초기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하여 각 지역의 고도(古都)에 박물관을 설치하여 식민통치 수단으로 활용했음은 잘 알려져 있다. 반면에 1931년 우가키 총독의 부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전문박물관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도 거의 알려진 바 없다. 전문박물관은 1935년 '시정25주년기념' 준비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 총독부의 각 부서들이 추진한 박물관을 통칭한다. 구체적으로 농림국의 농림박물관, 식산국의 광업박물관, 내무국의 산업박물관, 체신국의 체신박물관, 철도국의 철도박물관, 경무국의 경찰참고관이 있다. 전문박물관은 식민지인의 사상통제라는 박물관의 역할이 식민통치자의 정책 이행, 통치 자본 조성과 같은 경제적 효용성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배경에는 만주사변 이후 정세 속에서 식민지 조선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우가키 총독의 정책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역사계박물관은 일제의 조선지배 정당성 입증에 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력한 반면,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전문박물관은 조선지배 정책 홍보, 그에 따른 현안 해결의 수단이었다. 그래서 전문박물관은 박물관의 다양화가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이라는 미명하에 시도된 전문박물관은 식민지 박물관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인식 변화 즉 식민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

주제어: 전문박물관, 일제강점기, 농림박물관, 광업박물관, 산업박물관, 경찰참고관, 체신박물관, 철도박물관, 조선공업화, 시정25주년.

1. 머리말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서양 제국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박물관을 식민지 통치의 효율성 제고 수단으로서 주목했다.[1] 그리하여 1915년에 설립된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 기조인 조선의 정체성・타율성을 주장하며 조선인에게 식민사관을 주입하고, 일본의 근대성을 과시하여 일제의 조선지배 당위성을 선전하는 시각화된 지배 공간으로 기능했다. 이후 주요 역사유적지를 중심으로 설립된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1926), 개성부립박물관(1931), 평양부립박물관(1933), 조선총독부박물관 부여분관(1939) 등도 그 역할은 마찬가지였다.[2] 이 중에서도 조선총독부박물관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정책을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박물관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의 정신지배 즉 사상통제를 위한 역사계박물관만이 존재하였고, 전 시기 큰 변화 없이 지속된 것으로 오인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달리 1930년대 초반부터 일제는 일선동조와 타율성을 '증명'하고 선전하는 목적을 넘어선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 설립을 본격화했다.

새로운 박물관의 시작은 1927년 개관한 은사기념과학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역사 대신에 '과학'을 주제로 삼아 산업기술과 식민지 생산물의 선전을 목적으로 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식민권력을 옹호하여 식민지배자에게 복종을 유도한다는[3] 점에서 조선총독부박물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1) 大出尙子, 「日本の旧植民地における歷史・考古学系博物館の持つ政治性」, 『東洋文化研究』 第14号, 学習院大学東洋文化研究所, 2012, 1-2면.
2)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240-314면.

수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변화는 193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역사계박물관 즉 전문박물관[4]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전문박물관이 지니는 시대적 의미와 가치는 조선총독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조선종합박물관'에서 엿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지배의 전환점이라고 규정한 시정25주년의 대표 기념사업으로 조선종합박물관 조성을 택했다. 이 박물관은 역사계의 고고미술관뿐만 아니라 전문박물관의 일종인 과학관과 조선자원관을 포함한다.[5] 당시 조선총독부가 그리는 박물관 상(像)이 실질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1930년대 갑자기 등장한 여러 전문박물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박물관이라 함은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 부임 이후 조선총독부 각 부서들이 각자 소관 업무와 직결되는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했는데, 이를 통칭한다. 이러한 박물관은 1933년 농림박물관을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식산국의 광업박물관, 1934년 내무국의 산업박물관, 체신국의 체신박물관 그리고 경무국의 경찰참고관, 1935년에는 철도국의 철도박물관까지 총 6개의 전문박물관 설립 논의가 갑자기 줄지었다. 그리고 실제로 체신박물관, 경찰참고관, 철도박물관의 3개 전문박물관은 완공되고 대중에 공개되었다.[6] 즉, 단순히 설립 논의나 계획 수립 시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식민통치에 실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일제강점기 박물관연구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하여 개성, 평양, 부여와 같은 주요 역사 유적지에 설립된 박물관과 이왕가박물관을 계승한 이왕가미술관에 담겨있는 식민성 또는 식민문화 정책으로서의

3) 정인경, 「은사기념과학관과 식민지 과학기술」, 『과학기술학연구』 제5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 76-82면;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80면.

4) 이런 유형의 박물관을 묶어서 처음 소개한 『博物館研究』에서 '특수박물관'이라고 칭했다. 「朝鮮三大博物館建設案」, 『博物館研究』 第7巻 6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그래서 기존 역사계박물관과 차별성을 부각시켜주는 측면에서는 '특수박물관'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 하지만 이들 박물관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하여 '전문박물관'이라고 명명했다.

5) 「半島文化精華集成의大殿堂綜合博物館建設」, 『每日申報』, 1935. 8. 29.

6) 「京城에 農林博物館 三十萬圓을 多木氏寄附」, 『중앙일보』, 1933. 4. 19.; 「死藏한 標本 公開코저 研究」, 『동아일보』, 1933. 6. 23.; 「始政卄五年記念 産業博物館」, 『每日申報』, 1934. 6. 12.; 「工費 十六萬圓으로 遞信會舘을 新築 年來에 計劃決定」, 『每日申報』, 1934. 12. 9.; 「設計中의警察博物館十一月頃엔開館」, 『每日申報』, 1934. 3. 7.; 「철도박물관 개설」, 『조선중앙일보』, 1935. 10. 3.

활용성 등에 집중했다.[7] 반면에 1933년에서 1935년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전문박물관들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만주사변으로 일제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그 여파가 조선총독부에도 크게 미쳐 긴장이 높아가는 시점에 조선총독부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독자적 전문박물관 설립을 도모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례적인 전문박물관 열기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의 조선지배 전략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 변화는 식민지 박물관에 대한 일제의 인식 변화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역사계박물관은 식민지 통치 초반에 식민사관을 시각화하여 조선침략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졌다[8]. 하지만 전문박물관은 만주사변 이후 변화된 일제의 상황에서 조선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한 우가키 총독 재임기에 일제히 등장했다. 이는 전문박물관의 등장이 조선총독부의 조선 지배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자는 전문박물관의 성격과 의미를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지배 전략 변화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1930년대 이후 박물관의 특성을 밝히고, 궁극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박물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1930년대 박물관 지형을 바꾼 전문박물관의 등장배경과 설립과정을 상세히 검토하여 전문박물관의 특징을 규정하겠다. 이것을 기반으로 1930년대 특정 시점에 갑자기 등장한 전문박물관 현상의 의미를 일제의 조선지배 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전문박물관 연구로 일제강점기 조선의 박물관은 역사계박물관 일색

7) 최석영,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 『역사와 담론』 제27집, 호서사학회, 1999;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a; 「일제하 이왕가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제227호, 한국미술사학회, 2000b;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혜안, 2007; 이순자, 앞의 책; 김인덕, 「조선총독부박물관 전시에 대한 소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2011년 2월 22일; 오영찬,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제55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이성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미술자료』 제87호, 국립중앙박물관, 2015.

8) 김현정,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 구상의 식민성」, 『서울과 역사』 제94호, 서울역사편찬원, 2016, 106-109면.

이라는 편견과 착시가 걷히고, 다양한 관점에서 일제강점기의 박물관 연구가 진행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총독 부임과 전문박물관의 등장

1) 조선농림박물관과 타기 쿠메지로(多木久米次郎)

1930년대 거론된 여러 전문박물관 중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고, 상당 부분 진척되다가 갑자기 무산된 박물관이 바로 조선농림박물관(이하 농림박물관)[9]이다. 이것이 구체화되는 계기는 '비료왕'이라 불린 대지주 타기 쿠메지로[10]가 1933년 4월 조선총독부에 농림박물관 건축비 30만 원 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11]. 이에 조선총독부는 별다른 검토 없이 이 제안을 즉각 수용했다. 이를 담당한 농립국은 1933년 12월까지 박물관 부지와 설계를 확정한 후 이듬해인 1934년 봄에 착공한다는 계획을 신속히 마련했다.[12] 박물관 부지는 총독부 청사 앞의 조선보병대 부지[13]로 거론되다가 최종적으로는 토지개량회사 인근의 구 전매국 창고부지[14]로 결정되었다.[15] 설계 단계부터 농림국은 농림박물관의 규모와 성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16] 그 선전에 따르면, 박물관은 농촌을 상징하는 소박한 색채의 4층 철근 건물로 총 면적이 1200평이고,

---

9) 농림관, 농업박물관, 농림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대부분 자료에는 농림박물관으로 표현되었다.

10) 多木久米次郎(1859-1942)은 일본 최초의 인공비료제조회사 多木製肥所를 설립한 기업주다. 조선에서는 대지주이자 사업가로 조선농회 고문을 지냈다. 조선의 사업기반으로 일본 내에서 소위 '조선통'으로 불렸다. 金玄, 2009, 「植民地朝鮮と多木久米次郎 : 朝鮮における事業基盤と参政権問題」, 『海港都市研究』 第4号, 神戸大学文学部海港都市研究センター, 2009, 77-95면.

11) 「京城에 農林博物館 三十萬圓을 多木氏寄附」, 『중앙일보』, 1933. 4. 19.

12) 「農林博物館建築費 三十萬圓寄附 총독부에서는 경영책강구 肥料王多木氏厚意」, 『每日申報』, 1933. 4. 19.

13) 현재 정부서울청사(세종로 77번지)가 자리한다.

14) 전매국 창고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다. 다만 1930년대 토지개량회사 위치가 현재 서울시청 앞 플라자호텔이고, 그 인근에 있는 전매국 창고부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옛 남대문세무서 별관이 있던 곳으로 추정된다.

15) 「農産物販賣斡旋所 農博內에 設置」, 『每日申報』, 1933. 5. 16.

16) 「多木氏寄附 農林博物館 基地決定 태평통토지개량이웃에 建物도 堅實素朴」, 『每日申報』, 1933. 12. 17.

7-8백 명 수용의 대강당도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전시 구성과 내용은 조선의 각종 농산물과 임산물을 선정하여 '진일보한 조선농업의 개발'을 홍보하는 것이고, 이외 농업 전시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기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기존의 조선총독부박물관과의 비교를 염두에 둔 듯 나열 위주의 전통적인 '정적' 박물관이 아니라 진보적인 '동적'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세웠다. 그리고 박물관 내로 조선농회[17] 사무소의 이전, 농산물의 알선판매소 설치, 농업 관계자의 집회와 회의장 운영 등과 계획도 연달아 발표했다.[18]

하지만 농림국의 의지와 달리 농림박물관 진행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그 원인은 기부자 타기의 간섭이었다. 건축비를 기부하되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일체를 총독부에 위임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타기는 박물관의 설립에 깊이 개입했다. 사실 박물관 부지와 운영비 확보 등 주요 현안은 조선총독부가 담당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선총독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농림국은 타기를 대표로 하는 농림박물관건설위원회까지 설치해 줬다.[19] 심지어 박물관 설계는 타기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정식 승인을 받기까지 하였다. 농림국이 자신있게 내세운 '동적' 박물관이라는 성격 규정도 자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기와의 합의를 거쳐야 했다.[20] 또한 타기가 고문(顧問)으로 있는 조선농회가 농림박물관에 입주한다는 것도 타기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1] 농림박물관 설립의 모든 과정 중심에 타기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착공이 임박한 1934년 봄까지도 타기는 자신이 약속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있었다. 간섭만 하고 정작 기부금은 주지 않았으니 농림국의 계획은 제때 실행될 수 없었다.[22] 급기야 타기는 조선총독부의 조선농지령에 반대하며 기부금 납부 자체를 갑자기 거부했다.[23] 부지선

17) 김용달, 「'농촌진흥운동기' 조선농회의 성격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309면.
18) 「農産物販賣斡旋所 農博內에 設置」, 『每日申報』, 1933. 5. 16.
19) 「農林博物館 明春에 着工」, 『동아일보』, 1933. 10. 21.
20) 「農林博物館 今月中에 起工」, 『每日申報』, 1934. 3. 3.
21) 「農産物販賣斡旋所 農博內에 設置」, 『每日申報』, 1933. 5. 16.
22) 「最新建築의 農林博物館農村味表象設計」, 『동아일보』, 1933. 12. 19.
23) 「農林博物館의 建設計劃은 解消 多木氏寄付拒否로」, 『每日申報』, 1934. 5. 9.

정, 설계, 예산 확보 등 주요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조선총독부는 1934년 5월 공식적으로 농림박물관 건설을 중단했다.[24]

비록 무산되었지만 농림박물관은 최초의 전문박물관 시도라는 점에서 그 설립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배경은 1932년 개관한 일본 최초의 농업박물관인 오사카 부민협회(富民協會) 농업박물관이라고 생각한다. 이 박물관은 '농업' 업무를 담당한 관료출신이자 신문사 사장인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25]가 세운 것이다.[26] 모토야마는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동적' 박물관[27]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부민협회 농업박물관에 도입했다.[28] 당대 최신의 이 박물관을 조선총독부가 참고했다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바로 '동적' 전시 개념이다. 이는 두 박물관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동적' 전시라는 개념은 당시 일본에서도 부민협회 농업박물관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박물관의 설립자금은 설립자가 부담하고 부지의 제공은 관(官)에서 부담하는 박물관 설립 방식 그리고 '농업 진흥'이라는 목표의식도 일본의 농업박물관과 조선 농림박물관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두 박물관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모토야마는 일본 농업관계자를 위해서 박물관을 세웠으나[29], 이와 달리 비료제조 사업가인 타기는 조선을 비료사업의 '새로

24) 「農林博物館流產」, 『每日申報』, 1934. 5. 20.

25) 모토야마 히코이치(本山彦一, 1853-1932)는 일본 熊本縣 출신으로 福沢諭吉에게 수학하였고, 大阪每日新聞社長, 貴族院勅選議員을 거친 언론인이자 정치인이다. 「近代日本人の肖像」, 國立國會圖書館, https://www.ndl.go.jp/portrait/datas/569.html(2020. 9. 30. 검색).

26) 농업박물관은 5개의 전시실을 주제별로 나누어 토양 비료부터 품종개량, 원예작물, 농업경영 등을 비롯하여 대만, 조선, 만주, 사할린 등 식민지 농업 자료까지도 전시하였다. 「富民協會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5卷 9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27) 모토야마는 전시장 안에 진열품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박물관을 '정적'이라고 표현하며, 부민협회농업박물관은 농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농업 실물 자료를 보여주고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시를 '동적'이라고 칭하였다. 농업박물관의 전시물을 살펴보면, '비료 최소량 비율을 보여주는 분수탑', '토양의 조직(토양 단면도)', '야생 약초의 생태모형', '소맥 뿌리', '밀감과 포도의 새싹(芽) 상태 변이' 등이 실제 농작물, 모형, 표본, 도표 등으로 전시되었다. 「新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5卷 1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富民協會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6卷 11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28) 「新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5卷 1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農業博物館の開館」, 『博物館研究』 第5卷 8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移動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7卷 4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29) 「新農業博物館」, 『博物館研究』 第5卷 1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운 사업장'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30] 즉, 조선 농업이 개발될수록 자신의 부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일본의 농업박물관을 참조하여 농림박물관 설립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농림박물관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식민통치자 조선총독부 농림국과 식민지 재력가 타기의 접점은 바로 식민지의 수탈과 경제적 이익이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가 맞지 않자 농림박물관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라져버렸다.

2) 식산국의 광업박물관

광업박물관 논의는 1933년부터 표면화되었다. 일제는 조선 강점 직후부터 한반도 전역에 걸쳐 지질자원을 조사했고,[31] 1930년대 들어서 일본 광업자본 유치를 위한 광산조사와 광산개발을 진행하면서 조선은 '세계적인 특수광물의 표본실'로 회자되었다.[32] 그러므로 당연히 조선총독부 연료선광연구소와 지질조사소 창고에는 오랜 기간 수집된 수많은 광물이 쌓였다. 그러자 막대한 경비를 들여 수집한 많은 광물 표본 자료가 일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질박물관을 세우라는 요구도 생겨났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식산국은 광물표본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세우려고 애썼다.[33]

그렇지만 1930년대 총독부의 재정상황으로는 박물관 설립비 10만원 확보도 요원했다. 이에 식산국은 총독부 예산을 포기하고, 당시 한참 진행되고 있던 농림박물관과 같이 민간 재력가 자금에 기대어 광업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자금 확보 방향을 틀었다.[34] 식산국은 광산 재력가와 교섭하며 광업박물관 설립을 빠르게 구체화했다. 1934년 4월 즈음에는 기본적인 계획이

30) 金玄, 앞의 글, 77-95면.
31) 김성용・이재욱, 「해방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찰」, 『자원환경지질』 제48권 1호,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5, 83-86면.
32) 정안기, 「1930년대 조선형특수회사, 조선광업진흥(주)의 연구」, 대한경영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집, 2015년 11월 13일.
33) 「死藏한 標本 公開코저 硏究」, 『동아일보』, 1933. 6. 23.
34) 「民間篤志로 鑛業博物館建設 地中寶物의 標本을 公開 總督府에서 計劃中」, 『每日申報』, 1934. 2. 17.; 「鑛業博物舘」, 『동아일보』, 1934. 2. 17.; 「독지가 義損얻어 광업박물관 계획, 총독부에서 계획 중」, 『조선중앙일보』, 1934. 2. 19.

수립되었고, 총독부 내부 검토를 거치면 곧바로 건설비의 모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진척되었다. 식산국은 광업박물관 전시를 위해 대련(大蓮)의 만철광업박물관을 참고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전시 내용은 장시간에 걸쳐 수집된 조선의 광물 표본 자료를 진열하고, 주요 광물의 생산과정을 보여주어 광업 전반을 홍보하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화되었다.[35] 속도를 내던 광업박물관은 1934년 6월경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때는 조선총독부 전체가 나서서 다음해인 1935년 시정25주년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식산국은 착착 진행되던 광업박물관을 민간자본에 의지한 부서 단위의 소규모 전문박물관이 아니라, 총독부 차원의 '시정25주년기념사업'으로 확대시키고자 희망했다.[36] 하지만 광업박물관은 시정기념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고, 그 단계에서 멈추었다.

3) 내무국의 산업박물관

세 번째로 살펴볼 산업박물관은 앞에서 본 농림박물관과 광업박물관 설립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되었다. 왜냐하면 산업박물관은 1934년 5월 갑작스럽게 무산된 농림국의 농림박물관과 식산국의 광업박물관 설치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내무국 차원의 대안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37]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림박물관은 조선총독부 농림국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기에 부지선정에서 설계까지 일련의 주요과정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나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래서 내무국은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된 박물관 설립 사업을 그냥 사장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 계획을 확대·발전한 새로운 박물관을 제시했다. 그것은 무산된 농림박물관 계획에 총독부 예산 50만 원을 새로 투입하여 농수산임업뿐만 아니라 공업 및 광산업도 추가한 대규모의 산업박물관 설

35) 「計劃進行中이든 鑛業博物館實現 近間殖産局議를 經하야 斯界의 指導機關으로」, 『每日申報』, 1934. 4. 10.; 「광업박물관 구체화」, 『동아일보』, 1934. 4. 10.

36) 「始政卄五年記念事業文化硏究所의設立案이有力統治의參考資料를蒐集政務總監同意?」, 『每日申報』, 1934. 7. 17.

37) 「始政卄五年記念 産業博物館」, 『每日申報』, 1934. 6. 12.

립이다. 그리하면 '조선 산업의 전모'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반도 산업의 대전당'이 되어 농림박물관은 물론 광업박물관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무국은 강조했다. 즉 산업박물관은 무산된 농림박물관의 후속조치이자 유사 성격인 광업박물관 설립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38]

하지만 산업박물관 논의는 1934년 8월에 '조선종합박물관'이 시정25주년기념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곧바로 사라졌다. 왜냐하면 산업박물관은 조선종합박물관과 그 성격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39] 조선종합박물관은 조선총독부박물관과 은사기념과학관을 대체하는 고고미술관과 과학관을 경복궁 내에 신축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조선자원관'으로 개조하는 대규모의 박물관 조성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부인 조선자원관은 조선의 천연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광업박물관이나 산업박물관과 거의 유사한 성격의 전시관이다. 그래서 산업박물관도 초기 단계에서 좌초되었다.

앞에서 서술한 3개의 박물관은 완공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이를 통해 1933년에서 1934년 사이 조선총독부의 각 부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박물관 설립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보다도 이들 박물관 건설 논의는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이 아니라 조선종합박물관이라는 일제 대표적인 문화정책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각 부서의 독자사업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박물관의 열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정25주년 기념사업인 대규모의 종합박물관으로 확대・발전되어 간 것이다.

4) 조선체신박물관

1937년 7월, 1934년 말부터 진행된 체신박물관은 일제의 조선통치 중심지 일대인 부민관 옆 조선체신사업회관(이하 체신회관)[40] 내 부속시설로서 개관하였다.[41] 대규모의 단독 건물도 아니고 체신회관의 일부 공간을 활용

38) 「產業博物館」, 『동아일보』, 1934. 5. 29.; 「始政卄五年記念産業博物館」, 『每日申報』, 1934. 6. 12.
39) 「綜合博物館設置論이 最有力 始政卄五年記念事業關係當局協議進行」, 『每日申報』, 1934. 8. 28.
40) 고종의 후궁인 귀비 엄씨의 사당이 있었던 덕안궁 터에 체신회관이 위치했다. 1978년부터 서울국세청 남대문별관으로 이용되다가 2015년에 철거되고, 현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자리한다.

한 소규모 박물관이지만, 새로운 전문박물관이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일제강점 초기 통신국이던 체신국은 1912년 개칭 이후에 조선의 우편・보험・전화를 비롯하여 발전수력 및 항공 업무를 담당했다.[42] 1930년 전후하여 전력생산, 전화통신망, 보험 등이 체신국의 주요한 업무가 되면서 전시사업용 대용량 발전소 건설, 일본과 조선을 잇는 해저전신선 설치 같은 대규모 사업도 맡았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와 조선 그리고 대륙으로의 침략이라는 일제의 팽창과 함께 조선 체신사업의 중요성도 비례해서 확장되었다.[43] 이러한 높아진 위상에 따라 전쟁으로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는 시국 속에서도 체신회관 그리고 그 내부에 체신박물관이 설치될 수 있었다.

체신회관은 체신국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체신협회, 해사협회, 전기협회, 청사협회와 같은 체신국 관련의 관변단체를 위한 공간이다. 다른 전문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건축 부지는 체신국이 해결하고, 건축비 대부분은 체신 관련 관변단체가 부담했다. 그래서 총사업비 중 전기업자 7만 원, 우편소연합회 5만 원, 해사관계사 3만 원을 부담하고 체신국은 2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44] 1935년 4월 서울 부민관 인근으로 부지가 확정되고, 설계도 마무리되며 체신회관 건립은 순조로운 듯 했다. 그러나 본격적 공사는 1935년 12월에야 시작되었고, 1936년 10월의 완공 예정기한을 넘겨 1937년 7월에 겨우 끝이 났다. 게다가 준공 직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개관 행사도 취소하고 조용히 개관하였다.[45] 하지만 이러한 시국 상황과 별개로, 체신회관은 4층 철근 콘크리트에 총 건평 1300평에 이르는 상당히 큰 규모로 화려하게 신축되었다.[46] 체신박물관은 이 체신회관 1층에 간이보험 건강상담소와 나란히 배치되었다. 2-3층

41)「工費 十六萬圓으로 遞信會舘을 新築 年來에 計劃決定」,『每日申報』, 1934. 12. 9.;「遞信事務會館落成코一般에公開博物館健康相談所等設備落成式費로國防獻金[寫]」,『동아일보』, 1937. 7. 28.
42)『朝鮮總督府官報』 호외, 1912. 3. 28.;「조선총독부체신관서관제」 제3조(조선총독부칙령 제30호, 1912. 3. 27.).
43)「社會의發展에싸라遞信事業도進展一段의躍進을示한昭和十年(一)」,『每日申報』, 1936. 1. 1.
44)「工費 十六萬圓으로 遞信會舘을 新築 年來에 計劃決定」,『每日申報』, 1934. 12. 9.
45)「遞信事業會舘 披露費를 獻金」,『每日申報』, 1937. 7. 28.
46)「太平通에 偉觀일을 遞信事業會舘 본사 월편 부민관엽헤건설 從業員의 精神道場」,『每日申報』, 1935. 4. 7.

은 협회사무실, 강연장, 회의실 그리고 4층은 간이 숙박시설이 설치되었다.[47] 즉 체신 종사자들을 위한 다목적 시설에 체신박물관이 포함된 것이다.

체신박물관의 전시는 새롭게 기획된 것이 아니다. 그 모태는 '조선간이생명보험 5주년'을 기념하여 1934년 개최된 체신문화전람회(이하 전람회)였다. 당대 최고의 근대 시설인 미쓰코시(三越)백화점[48]에서 SOS 자동수신기, 단파전파 모형, 자동전화교환, 평균수명표시기 등 최신 통신기기가 전시되었다. 그 외 일명 '비둘기 통신' 시연과 항공 등대를 이용한 조명과 같은 볼거리도 마련되었다.[49] 이 전람회는 이듬해 1935년에 '시정25주년기념'이자 '체신기념일' 기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경성뿐만 아니라 부산, 평양, 원산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개최되었다.[50] 그리고 1937년에는 체신회관 내 체신박물관에서 상설 전시되었다.

전시는 통신일반, 보험, 항공・해사, 전기・가스, 토목・건축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며,[51] 주제와 내용이 기존 체신전람회와 거의 일치한다. 제1전시실은 항공, 수력・조력발전, 우편 및 전화, 저금・생명보험, 라디오 관련의 참고품과 디오라마로 조선 체신사업 전반을 다루었다. 제2전시실은 대한제국기 체신의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대체로 우편지도, 우편 기기, 지게, 마구, 용지, 우체통 등 전근대적 자료를 전시하였다.[52] 이 공간은 조선총독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전시물을 통해 근대화된 일본과 전근대의 조선이라는 이미지 조작을 위한 곳임을 알 수 있다. '박물관주간'에는 "황국신민의 서사", "내선일체" 등 당시 식민통치의 핵심 정책 표어를 유명 그림엽서에 인쇄하여 관람객에게 나누어주며 조선총독부의 황민화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53] 즉 체신국은 박물관 목적이 체신 종사자들에게는 교양을 함양하고

47)「遞信事業會館 十一월부터 건축공사 착수 太平通은 大厦街」,『每日申報』, 1935. 10. 22.
48) 조선총독부는 미쓰코시 백화점을 '일본문화의 보급' 통로로 활용했다. 하야시 히로시게, 김성호 옮김,『미나카이백화점』, 논형, 2007, 96면.
49)「朝鮮遞信文化展覽會」,『동아일보』, 1934. 9. 12.;「簡保創始十五週年 記念遞信文化展」,『每日申報』, 1934. 9. 12.;「遞信文化展 오는 十일부터」,『每日申報』, 1934. 10. 9.;「遞信文化展 大盛況延期」,『每日申報』, 1934. 10. 16.
50)「十月一日은 同時에 遞信事業創定記念 各種記念事業의 準備에 當局奔忙」,『每日申報』, 1935. 8. 30.
51) 조선총독부,『施政三十年史』, 朝鮮印刷株式會社, 1940, 841면.
52) 국성하,『한국 박물관 100년사: 본문편 1909-2009』, 국립중앙박물관, 2009, 218-219면.
53)「朝鮮の博物館と陳列館(其二)」,『朝鮮』昭和13年7月号, 朝鮮総督府, 1938, 111-115면.

일반인에게는 체신사업에 관한 지식 보급이라고 했지만,[54] 일반적 식민지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식민 통치를 위한 정신교화적 문화공간으로 기능했다.

체신박물관은 체신회관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1937년 7월 개관 이후 그해 말까지 총 관람객은 31,119명에 이르렀다. 이후 1938년과 1939년에도 관람객 규모는 연 21,000명에 달했다.[55] 1938년 조선총독부박물관 관람객이 약 6만3천 정도임을 감안하면,[56] 체신회관의 부속으로 작게 설치된 체신박물관의 관람객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57] 그런 점에서 체신박물관은 전문박물관 중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조선체신회관[58]

5) 경찰참고관

경찰참고관[59]은 조선경찰협회의 '일본황태자탄생' 기념사업[60]으로 1934년

54)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40, 841면.
55) 「遞信博物舘觀覽者」, 『每日申報』, 1939. 2. 7.; 「遞信博物館 參觀者激增」, 『每日申報』, 1940. 4. 21.
56) 김인덕, 『한국박물관 100년사 : 본문편 1909-2009』, 국립중앙박물관, 2009, 136면.
57) 「南總督今日 遞信事業會舘視察」, 『每日申報』, 1937. 8. 3.
58) 『朝鮮の建築』, 朝鮮建築会, 1937. 9.
59) 1934년 처음 거론될 당시에는 경찰회관, 경찰박물관이라고도 불리었다.
60) 이 기념사업은 일본 내지뿐만 아니라 대만과 조선에도 행해졌다.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조선에서 계획 중인 기념사업을 조사하여 일본 척무성에 보고까지 하였다. 부산에서는 향토박물관, 수족관, 기념관 설립을 기념사업안으로 제출하였다. 「皇太子殿下御誕生記念事業 博物館建設の計劃各地に起る」, 『博物館研究』 第7巻 4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3월에 시작되어 1936년 개관됐다.[61] 당시 경찰을 주제로 한 박물관은 일본에도 메이지대학교(明治大學校) 형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그 사례가 없다.[62]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경찰박물관이 조선 그것도 식민통치의 중심지인 광화문 일대에 세워졌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박물관이다. 경찰참고관은 다른 전문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경찰협회에서 설립자금을 마련했고, 건물 설계와 부지 등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담당했다. 1934년 4월 경찰참고관 신축 발표 직후 사업비 모금이 거의 완료되어 그해 11월 완공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1936년 6월에서야 겨우 끝이 났다.[63] 경찰참고관도 재정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던 1930년대의 사업인지라 어렵게 마무리 되었다. 건축비 8만원 정도 소규모의 사업이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경찰과 관계 직원들 월급을 갹출까지 해서 해결했다.

경찰참고관은 부지로 총독부 청사 뒤 또는 광화문 일대가 논의되다가 경찰관강습소[64] 부지 내로 결정된 후 연건평 350평의 3층 규모로 신축되었다.[65] 당초 설계도면을 보면, 1층에 전시실과 사무실 그리고 응접실, 2층에는 넓은 전시실 이외 일본식 방이 있다. 3층에는 주로 강당과 무대, 도서연구실, 영위봉안실과 같은 비전시공간이 배치되었다.[66] 그런데 실제 완공된 경찰참고관에는 당초 설계도면에도 없던 특별참고실이 존재했다.[67] 전시 주제는 형사 관련뿐만 치안, 국방 등을 포함하여 교통, 방공, 위생 등이다. 전시품은 조선시대 치안관련 자료, 항일독립군[68]으로부터 빼앗은 노획물, 국경경비대와 경찰관 유품 등이다.[69] 경찰참고관은 경찰 홍보와 선전을 위한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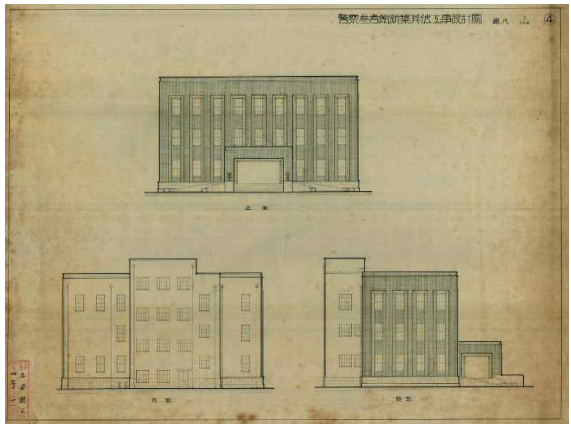
61) 「設計中의警察博物館十一月頃엔開館」, 『每日申報』, 1934. 3. 7.; 「완성된경찰참고관, 27일영령천좌제 개관은28일부터」, 『부산일보』, 1936. 6. 7.; 「警察參考館落成式盛大히擧行」, 『每日申報』, 1936. 6. 28.
62) 「刑事博物館とその蒐集品」, 『博物館研究』 第7巻 3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63) 「警察參考館八月에着工」, 『每日申報』, 1934. 6. 27.; 「田中警務局長式辭」, 『每日申報』, 1936. 6. 28.
64)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주한미국대사관이 위치한다. 1934년 당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가 자리했고, 그 남쪽 일부 공간에 경찰참고관이 세워졌다. 「警察參考館今秋까지竣工」, 『每日申報』, 1934. 4. 7.; 이순우, 『광화문 육조앞길』, 하늘재, 2012, 290면.
65) 「警察參考館今秋까지竣工」, 『每日申報』, 1934. 4. 7.; 「警察參考館八月에着工」, 『每日申報』, 1934. 6. 27.; 「警察參考館落成式盛大히擧行」, 『每日申報』, 1936. 6. 28.
66)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securityOffice.do?flag=14(2020. 9. 30. 검색).
67)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40, 841면.
68) 관련 자료에는 '匪賊'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시공간을 주목적으로 했지만 실제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 1938에는 '민중경찰'과 '민중편의' 명분으로 경찰안내소가 설치되었다.[70] 본격적인 전시체제인 1940년대 들어서는 대방공 연습건물, 방공지도사 실무강습회 등 전쟁 관련 공간으로 활용되었다.[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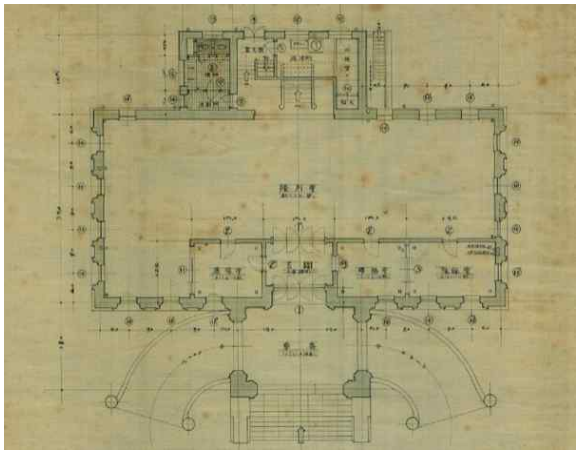
경찰참고관은 일반적 박물관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통치 잔혹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공간이었다. 그것이 바로 비공개 특별참고실의 존재이다. 설계에는 없던 특별참고실이 만들어진 이유는 전시의 참혹성 때문이다. 1936년 6월에 이마이다(今井田)정무총감 이하 각 도(道)경찰부장이 참석한 개관식에서 전시내용이 공개되었다[72]. 하지만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여 전시를 둘러본 도(道)경찰부장들 조차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어 경찰참고관을 당분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내용을 전면 수정하거나 공개방식과 관람대상을 변경하기로 했다.[73] 그래서 전시실은 일반 공개와 특별 공개 공간으로 나뉘었다. 문제시된 부분을 '치안방해'와 '풍속교란'이라는 주제로 묶어서 특별 공개 공간에 별도 전시하며 이곳을 특별참고실이라고 했다. 이후 이곳은 일반 공개하지 않고 경찰의 치안공작 교육 등에 활용되었다.[74] 일본 경찰들도 차마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라면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끔찍한 장면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듯 경찰도 당혹할 정도로 참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참고실의 존재는 전문박물관의 식민지적 잔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동시에 전문박물관을 어떻게 활용하려는지 당시 총독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69)「警察參考館落成式盛大히擧行」,『每日申報』, 1936. 6. 28.
70)「경찰안내소」,『동아일보』, 1938. 7. 20.;「경찰안내성적」,『동아일보』, 1938. 7. 29.;「渡航問議(도항문의)가首位(수위) 警察案內(경찰안내)에相議遝至(상의답지)」,『동아일보』, 1939. 9. 3.
71)「大防空演習(대방공연습) 統監部陣容(통감부진용)」,『동아일보』, 1940. 6. 3.
72)「警察參考館落成式盛大히擧行」,『每日申報』, 1936. 6. 28.
73)「애써 한 경찰참고관[參考館], 일반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부장회의를 기회로 검토」,『부산일보』, 1936. 6. 30.
74) 조선총독부, 앞의 책, 1940, 841면.
75)「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eid=0000047254#1(2020. 9. 30. 검색).



〈그림 2〉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각자도 / 4호[75]



〈그림 3〉 경찰참고관신축기타공사설계도 / 일계지하실평면도급지형복기타도 / 2호[76]

6) 철도박물관

철도박물관은 만철이 위탁경영하던 조선철도의 조선총독부 직영화 10주년을 기념하여 1935년에 용산 철도학교 부지[77]에 설립되었다.[78] 조선철도는

76) 「일제시기 건축도면 컬렉션」,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viewer/common/archWebViewer.do?eid=0000047258(2020. 9. 30. 검색).

일본의 대륙 진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었다. 1925년에 조선철도가 만철에서 조선총독부 직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개발과 수탈에 필요한 산업 정책 수립과 이행에 독자적인 조선철도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선총독부의 주장과 만주에서 만철의 위기 등 대내외적 환경이 맞물린 결과였다.[79] 나아가서 일본과 만주를 이어주며 대륙진출을 위한 신경망과도 같은 조선철도의 조선총독부 직영화는 조선철도정책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이후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배와 수탈을 위한 기존의 철도정책 틀 위에 대륙과의 연결, 식민지 공업화, 전쟁 수행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조선철도 12년 계획'으로 독자적인 조선철도 정책을 실시했다.[80]

조선철도 직영화 10주년을 위하여 철도국은 1935년 4월 1일 당일에 성대한 기념식과 기념사업 등을 예정했다. 그런데 기념식은 실제 기념일보다 2개월이나 지난 6월에 했고, 기념사업으로서 철도박물관 설립 계획도 5월에서야 발표되는 등 철도직영화 10주년 관련 사업은 제때 실행되지 못했다.[81] 10주년 기념 분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마침 철도학교와 종사원의 기숙사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고, 철도 부지와 관련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에 철도박물관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래서 1935년 10월 1일 '시정 25주년기념일'에 맞추어 일반 공개되었다. 철도국은 철도박물관을 '교통문화의 금자탑'으로 홍보하며, 러일전쟁 때 군용철도로 출발한 조선철도가 1930년대 이후 대륙을 잇는 국제철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선전했다.[82]

철도국이 내세운 박물관의 설립 취지는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조선철도의 변천사로 일제에 의해 근대화된 조선을 보여주고, 둘째는 교통도덕과

77) 현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1 일대로 옛 세계일보 자리이다.
78) 「交通文化の金子塔鐵道博物館を建設」, 『京城日報』, 1935. 5. 1.; 「鐵道博物館, 철도학교터에」, 『동아일보』, 1935. 5. 20.; 「철도박물관 개설」, 『조선중앙일보』, 1935. 10. 3.
79) 정태헌, 「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 『韓國史學報』 제60호, 고려사학회, 2015, 410-420면.
80) 김경림, 「일제하 조선철도 12년 계획선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제12호, 경제사학회, 1988, 106-107면.
81) 「鐵道博物館」, 『동아일보』, 1935. 5. 20.; 「滿鐵서 넘어온 十週年紀念一 일성대히축하식을거행 龍山鐵道國慶事」, 『每日申報』, 1935. 6. 2.
82) 「鐵道博物館來る一日に開く半島鐵道の金子塔」, 『京城日報』, 1935. 9. 24.

사고방지 등 교통 관련 상식 보급과 인식 제고이며, 셋째는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이라는 취미 함양이다.[83] 관람객은 개관 당일 약 500명, 1주일 동안 약 2600명, 그 다음달 11월 약 2100명 규모였다.[84] 철도박물관은 야외전시실과 5개의 실내전시실로 구성되었다.[85] 야외에는 기관차, 객차, 화물차 실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각 부품의 작동방식과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 기관차를 분해하여 전시했다.[86] 전시물 이동에 필요한 선로가 야외전시실에서 인근 철도공원[87]까지 연결되어 있었고, 개관 이후 1936년에 10여 기의 새로운 전시물이 추가되기도 했다.[88] 야외에 기차 관련 실물을 전시했다면, 실내에는 주로 조선철도 역사와 관련된 자료를 진열했다.

철도박물관의 전체 전시구성을 알 수는 없으나 주요 전시물만으로도 박물관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중 하나가 1899년 경인선 개통 시 서울과 인천을 운행하다가 노후화되어 함흥, 원산 등 철도공장에 있던 조선 최초의 기관차이다. 이것을 '지금의 기관차와 비교하면 장난감 같지만'이라고 표현하며[89] 노후화된 조선 최초의 기관차와 1930년대 최신의 기관차를 대조시켜 자연스레 전근대적 조선이 일제 지배 이후 근대화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다는 점이 전시에서 드러난다. '철도'가 가지는 근대성을 통해 일본의 우월성 표출이 전시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그런데 철도박물관은 다른 전문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조선종합박물관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철도박물관 설립 발표 직후인 1935년 8월에 발표된 조선종합박물관 조성계획에 이미 철도박물관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90] 즉 용산의 철도박물관은 조선종합박물관으로의 이전을 염두에 둔 한시적이고 과도기적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종합박물관사업이 초

83)「鐵道博物館, 철도학교터에」,『동아일보』, 1935. 5. 20.
84)「大盛況 이룬 鐵道博物館」,『每日申報』, 1935. 10. 9.
85)「철도박물관 개관」,『동아일보』, 1935. 10. 2.
86)「鐵道博物館에 機關車分解備置」,『동아일보』, 1935. 12. 15.
87) 현재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와 용산세무서 인근(용산구 한강대로 14길)에 해당된다.
88)「鐵道博物館인긔가 매우 높다」,『每日申報』, 1936. 3. 26.
89)「半島最初の機關車—鐵道博物館に出陳」,『京城日報』, 1935. 8. 6.
90)「대종합박물관이 설립되면 은사와 철도박물관도 이관 예정」,『동아일보』, 1935. 7. 6.

기 포부나 기세와 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다가 끝내 완공되지 못하면서[91] 철도박물관은 독자적으로 존속했다.

이상과 같이 193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 여러 부서가 추진한 6개의 전문박물관을 살펴보았다. '시정25주년'이라는 시대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총독부 부서들이 전문박물관 설립에 열을 올렸다. 실제로 체신박물관, 철도박물관, 경찰참고관은 개관하여 식민지 문화정책에 활용되었다. 농림박물관과 광업박물관은 상당히 진척되다가 도중에 무산되었지만 경찰참고관과 더불어 '三大博物館'이라고도 불리며 상당한 관심을 받기도 했다.[92] 산업박물관과 광업박물관은 또 다른 대규모 전문박물관인 조선종합박물관 사업에 흡수되면서 마무리되었다. 즉 시정25주년으로 고조된 전문박물관 열기는 조선종합박물관이 추진되면서 잦아들었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은 1930년대 들어서 이와 같은 전문박물관 설립 움직임은 비단 조선총독부뿐 아니라 식민지 조선 곳곳에서 불고 있었다는 것이다. 함경도에서는 도청사 이전 후 그곳을 야외박물관[93]으로, 부산에서는 수산박물관[94]과 문화박물관[95]이 논의되기도 했다. 즉 전문박물관 설립 열기는 조선총독부 내부뿐 아니라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국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총독부 각 부서 단위의 사업으로 축소해서 볼 수 없으며,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아야함을 의미한다.

3. 전문박물관 설립의 특징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문박물관은 논의 시점의 한시성과 설립 배경, 추진방식 그리고 설립 목적 등에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일제강점기 역사계박물관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추진되었다. 그런 점에서 1930년대 전문박물관의 설립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전문박물관의 등장

91) 김현정, 앞의 글, 99-104면.
92) 「朝鮮三大博物館建設案」, 『博物館研究』 第7卷 6号, 日本博物館協會, 1934.
93) 「함남에 오픈 에어 뮤지엄 설립」, 『博物館研究』 第5卷 8号, 日本博物館協會, 1932.
94) 「水産博物館과 水族館設置希望 釜山은大陸의關門으로最適 大島府尹考慮中」, 『每日申報』, 1933. 4. 14.
95) 「文化博物館을 釜山에 建設키로 舊英領事館 基地를 買收 建築費는 香椎氏가」, 『每日申報』, 1934. 10. 10.

의 의미와 변화된 역할을 파악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전문박물관의 첫 번째 특징은 1933년에서 1935년까지의 짧은 시간에 특정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농림박물관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조선총독부 각 부서의 주요 계기 혹은 기념일과 관련되었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모두 시정25주년기념에 연계되었다. 우선 체신박물관은 조선간이보험5주년, 시정25주년, 체신기념일이라는 여러 계기가 중첩되어 설립되었다. 조선간이보험의 성장세를 과시하기 위한 1934년의 체신문화전람회가 1935년에는 시정25주년기념이자 체신기념일 제정 기념행사로 확대되었고, 1937년에는 체신회관 내 체신박물관 상설전시로 귀결되었다. 철도박물관은 1935년의 조선철도 직영화 10주년이라는 철도국의 주요계기사업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시정기념일에 맞추어 개관하며 철도직영기념이 아니라 시정25주년기념 사업화되었다. 경찰참고관은 경무국의 관변단체인 조선경찰협회의 '일본황태자탄생기념'사업으로 시작되어 시정25주년과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지지부진했던 경찰참고관이 1936년에라도 겨우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기금 마련, 부지 선정과 건물 설계 등과 같은 중요한 과정이 시정25주년사업을 한참 준비하던 1934년에 일단락되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전문박물관은 조선총독부와 관련된 주요 계기 기념사업이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계기는 '시정25주년'이다. 조선총독부에게 시정25주년은 단순히 조선지배 25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만주사변 이후 전운이 고조되어 가는 국제정세에 맞게 조선지배방식을 재편하는 전환점이자 조선통치 제2기의 시작점을 의미했다.[96] 그렇기에 조선총독부는 1934년부터 1935년의 시정25주년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광업박물관과 산업박물관 같이 각 부서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전문박물관 사업도 시정25주년 분위기에 편승했다. 광업박물관은 시작단계부터 총독부 예산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나, 총독부 차원에서 시정25주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자 식산국은 기존 계획을 변경했다. 광업박물관을 부서

96) 「過去治績을 基礎로 한 第二期 建設의 出發點 政務總監 今井田淸德」, 『每日申報』, 1935. 10. 1.

의 사업이 아니라 시정25주년의 대표적인 기념사업으로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내무국이 중단된 농림박물관에 거금 50만원을 새로 투입하여 기존 농림박물관 계획보다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산업박물관을 제안한 것도 시정25주년 준비라는 시대적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 즉, 전문박물관 논의가 이 시기에 집중된 것은 소위 '시정25주년'이 갖는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했다.

전문박물관의 두 번째 특징은 표면적으로 민간 재력가 또는 관변단체 등 조선총독부 외곽조직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농림박물관, 광업박물관, 체신박물관, 경찰참고관은 관변단체 또는 민간이 설립자금을 담당하고, 자금 이외는 총독부 부서가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실 외곽조직은 일반적인 민간단체가 아니라 식민지 관료가 단체 운영에 직접 개입한 관변단체이다.[97] 그러므로 전문박물관은 총독부 외곽 조직의 사업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총독부의 각 부서가 박물관 설립에 관변단체를 동원한 이유는 자금 조달 때문이다. 시정25주년기념이라는 성대한 사업을 계획하는 표면적인 분위기와 달리, 총독부는 관련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외곽단체나 민간 자본을 동원하고자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조선종합박물관의 추진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종합박물관은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부터 민간 기부금에 상당부분 의존했고, 해가 갈수록 민간 부담금이 커지다가 어느 시점에는 총독부 예산을 넘어섰다.[98] 민간 자본 동원을 위해 총독부는 대기업과 민간 재력가에 후원을 호소하다가 나중에는 민간의 소액 기부금까지 받을 정도였다.[99] 이러한 박물관 영영에서 긴축재정과 외곽조직 동원은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총독부의 대표 박물관인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20년대부터 박물관 확장을 위해 매년 예산 확보에 힘써 왔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했으나, 총독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1930년 연말에 이 계획을 완전 폐기하였다.[100]

97) 윤해동,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2010.
98) 김현정, 앞의 글, 94면.
99) 「在城有力者 六十名招待 總監이 博物館建設問題로」, 『每日申報』, 1935. 8. 28.; 「博物館建設後援會 設立에 對하야」, 『每日申報』, 1935. 9. 26.

또 다른 예로서, 1920년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계속되던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사업이 1931년부터는 조선고고학연구회라는 외곽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조사비는 당연히 조선고고학연구회가 마련하였다.[101] 이를 요약하자면, 조선총독부의 긴축재정 상황이 1931년부터 호전되었다고는 하나,[102]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여의치 않았기에 조선총독부 부서들은 각자 전문박물관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되, 필요 자금은 조선총독부가 아닌 민간 또는 관변단체에서 조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외곽 조직에 의한 자금 조달방식은 전문박물관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바로 박물관 설립 과정에 민간 또는 관변단체가 깊숙이 개입하고 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졌다. 일제강점기 관변단체는 기본적으로 조선총독부가 단체결성을 유도하고 운영에도 관료가 깊이 개입하는 어용단체이며 조선총독부와 일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익집단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다. 더욱이 전문박물관은 문화 향유나 교양 함양 등과 같은 교육적 차원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었기에 완공 후 전시공간보다는 관련단체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도 강했다. 농림박물관은 완공 후 농촌진흥운동의 관제 조직인 조선농회가 입주하여 농업관련자의 집회소 및 농산물판매 알선소로 활용하려고 했다. 체신박물관은 체신회관 내 일부 공간을 사용했고, 그 외 대부분의 공간은 간이보험상담소를 비롯하여 체신 관련 협회 사무소, 집회장, 숙박 시설로 활용되었다. 경찰참고관은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였다. 독립된 건물에 대부분이 전시공간으로 설계되었다고 하나, 일부 전시실은 일반에 공개도 되지 않는 공간이며 또 일부 공간에는 경찰 순직자 영위봉안실이 있으며, 또 다른 공간에는 중국이나 만주, 일본으로의 도항(渡航) 등 출입국에 관한 사무소를 보는 경찰협회의 경찰안내소[103]가 설치되었다. 이렇듯 박물관이라는

100) 「文化高低의 標準, 總督府 博物館 擴張에 就하여, 文學博士 黑板勝美氏 談」, 『每日申報』, 1922. 3. 21.; 「博物館擴張案 財政難으로 流產」, 『동아일보』, 1930. 12. 11.

101) 김인덕, 『한국현대사와 박물관 연구』, 국학자료원, 2018, 78면.

102) 이준영, 「일제강점기 하야시 시게조(林繁藏)의 조선경제 운영구상과 실행전략」,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18, 120면.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공간은 관변단체의 이익과 사무를 위한 것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전문박물관은 조선총독부가 조선지배의 새로운 전환기로 설정한 1935년 '시정25주년기념' 이라는 분위기에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총독부는 박물관 설립 예산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에 총독부 각 부서들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외곽 조직을 활용하여 전문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문박물관은 식민통치를 위한 전시공간이지만 온전히 전시관으로 기능할 수 없었다. 자금을 지원한 외곽 단체 즉 관변단체를 위한 공간이기도 했다.

〈표〉 1930년대 전문박물관 설립 논의 현황

종류	주요 계기	준비	결과	사업 주체	사업비	박물관 형태	(예정) 규모
농림박물관	일본 부민협회 농업박물관	1933	무산 (1934)	타기 쿠메지로, 조선총독부 농림국	30만원 (건축비)	단독 (신축)	연건평 1200㎡ (지하1, 지상4)
산업박물관	시정25주년기념	1934	흡수	조선총독부 내무국	50만원	단독 (신축)	?
광업박물관	시정25주년기념	1933	흡수	조선총독부 식산국, 광산 재력가	10만원	?	?
체신박물관	체신회관 건설 시정25주년기념 체신일 제정	1934	1937	조선체신협회, 조선총독부 체신국	16만원 (체신회관)	부속 (신축)	연건평 770㎡ (4층) 中 1층
경찰참고관	일본황태자탄생기념	1934	1936	조선경찰협회, 조선총독부 경무국	8만원	단독 (신축)	350㎡ 3층
철도박물관	조선철도 직영화 10주년 시정25주년기념	1935	1935.10	조선총독부 철도국	?	단독 (기존)	전시실 5, 야외 1

4. 1930년대 전문박물관 현상의 의미

전문박물관의 기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조선총독부의 각 부서가 각자의

103) 「鮮警察協會에서警察參考舘과三越京城支店3층에警察案內所를設置,事務가開始되다.」, 『동아일보』, 1938. 7. 20.

박물관 설립을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박물관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고, 식민통치 수단으로서 박물관의 효용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물관의 범위가 역사나 문화재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그 배경에는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의 부임과 그리고 그의 조선지배 구상이 자리한다. 전문박물관 설립 논의와 전개는 우가키 총독의 재임 기간 내에 추진되었다. 즉 전문박물관 설립 움직임은 우가키 총독 부임 전후한 시기 일제의 정세와 이에 따라 변화된 조선지배 정책의 산물이자 정책의 실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만주사변 직전 1931년 6월 우가키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할 당시, 일제는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졌고 군부의 파쇼화가 만주 침략으로 표면화되면서 중국과 소련에 대한 전쟁 준비를 강화해 가고 있었다.[104] 이에 조선총독부의 조선지배정책도 일제의 국내외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선총독 우가키는 일제가 당면한 경제난과 체제 위기의 타개 수단으로 조선의 활용성에 주목했다. 이 구상 하에 '내선융화'와 '농공병진'을 주창하며, 농촌진흥운동과 조선공업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다.[105] 농공병진의 한 축인 농촌진흥운동에 대해 우가키는 "조선지배의 성패를 걸고 총력을 기울여 전개한 관제 농민운동"이라고 하였다.[106] 농촌진흥운동은 표면적으로 '조선의 갱생'을 주장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선공업화를 위한 조치로서 일제의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식민지인으로의 정신개조가 목적이다.[107] 조선총독부는 농촌진흥운동을 담당할 농림국을 1932년에 신설하여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이후 1935년에는 '일선만 블록경제'를 구체화하며 농촌진흥운동을 재편하고 조선공업화정책을 추진하였다.[108] 전

104) 안유림,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梨大史苑』 제27집, 이화여대 사학회, 1994, 142-148면.
105) 전상숙, 「우가키 총독의 내선융화 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 정책」, 『현상과 인식』 제34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42-48면.
106) 지수걸,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53면.
107) 전상숙, 앞의 글, 42-48면.
108) 이윤갑, 「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 『大邱史學』 제87집, 대구사학회, 2007, 73-78면.

시체제에서 일제의 승리를 위한 식민지 조선의 활용 극대화, 다시 말하면 병참기지화를 위한 준비가 우가키 총독의 정책 방향이다.

전문박물관은 이와 같은 우가키 정책이 박물관 영역에서 발현된 시대의 산물이다. 기존의 역사계박물관은 우가키가 주창한 내선융화와 농공병진 슬로건에 미흡했다. 새로운 식민지배 전략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박물관이 필요했고, 그것은 바로 전문박물관의 추진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조선총독부 각 부서들은 조선지배 전환점인 시정25주년기념 사업으로 전문박물관을 선택했다. 전문박물관의 역할은 크게 2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로는 관념적 차원으로서 모든 식민지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식민지인의 사상통제를 위한 정신교화 역할이다. 이는 기존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설립에서부터 견지해 온 박물관의 목적과 일치한다. 두 번째는 현실적 차원으로서 우가키 정책의 핵심인 농공병진 이행과 이에 따른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선전과 홍보의 역할이다. 이것이 전문박물관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첫 번째, 전문박물관도 역사계박물관의 전시와 마찬가지로 전근대 조선과 근대의 일본이라는 2분법적 도식 연출로 식민지배자의 우월성 창출하고 이를 식민지인에게 주입하는 정신교화가 주된 역할이다. 하지만 우가키 이후 변화된 조선지배정책에서 전문박물관이 가지는 정신교화 의미는 크게 다르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공간이 경찰참고관이다. 이곳은 기존 박물관과는 차원이 다른 폭압적 정신교화 공간이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민중경찰론'이라는 기만적 친화정책을 취했으나, 만주사변을 계기로 민중통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다시 전환했다.[109] 이에 경무국은 일본 내지에도 없고, 경찰 관계자조차도 일반 공개를 비판할 정도의 참혹한 내용을 전시하는 경찰참고관을 만들어 민중을 통제하고 억압하는데 활용하고자 했다. 경찰참고관과 같은 위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신교화 공간의 등장은 1930년대 이후 폭력과 탄압을 통하여 조선인의 정신지배를 더욱 강화하려 했던 일제의 실체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09) 김정은,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내용과 논리」, 『역사와 현실』 제3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322-329면.

두 번째, 전문박물관이 역사계박물관과 가장 차별화되는 특징은 현실적 차원의 역할이다. 구체적으로는 농공병진정책의 효과적 이행 지원과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일조하기 위한 홍보와 선전이다. 모든 전문박물관은 조선총독부의 농공병진정책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면서 또한 총독부 각 부서의 현안과 직결된다. 특히 농림박물관과 광업박물관은 우가키의 핵심 정책인 농촌진흥운동과 조선공업화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한 농림국과 식산국에서 추진한 전문박물관이기에 이러한 특징을 더 잘 보여준다. 비료왕 타기가 조선총독부에 농림박물관을 제안한 1933년 4월은 농림국이 관변단체인 조선농회를 앞세워 농촌진흥운동을 일제히 시작하던 그 시기이다.[110] 농림국이 농림박물관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농촌진흥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으로 박물관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광업박물관 역시 1930년대 식산국의 조선공업화정책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자본 마련이 기본 목적이었다. 1932년 농림국에서 분화된 식산국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조선 광업자원 개발과 '일선만 경제블록'에서 조선경제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시설 구축이었다. 당시 식산국 관료들은 광업개발과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본유치를 위해 일본 자본가와 일본 관료를 초청하여 조선의 산업 발전 가능성을 선전하는데 한창 열을 올렸다.[111] 그래서 식산국은 일본 독점자본을 조선에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 공간으로서 광업박물관이 필요했다. 즉 광업박물관은 정책 선전과 동시에 정책 이행을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한 공간이었다. 광업박물관은 추진 도중에 폐기되었지만, 이러한 홍보관으로서의 성격은 조선종합박물관의 '조선자원관'으로 계승되었다.

체신박물관과 철도박물관은 농공병진 추진의 기반이면서 조선총독부의 식민통치 자금 확보 즉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한 홍보 시설이다. 체신박물관의 경우, 조선간이보험의 급성장을 과시하기 위한 전람회가 여러 해를 거쳐 전시되면서 상설화된 것이다. 그 궁극적 이유는 통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있는

110) 이상의, 「1930년대 조선총독부 殖産局의 구성과 공업화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92면.

111) 이병례,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17면; 이상의, 앞의 글, 100-107면.

간이보험의 납입금 증대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1929년 영업을 시작한 조선간이보험은 강제 가입으로 실시 5년 만에 계약보험금이 1억원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했다.[112]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여 1941년 9억 9천여만여에 달했고, 1945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간이보험에 가입할 정도였다. 이렇게 수탈된 납입금은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제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113] 체신박물관은 사실상 박물관이라기보다 조선간이보험의 홍보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간이보험 상담소 바로 옆에 체신박물관이 위치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철도박물관은 철도수익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철도국의 자구책 중 하나이다. '민중의 여행 취미 고취'라는 철도박물관의 설립 목적은 궁극적으로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른 철도 수입의 증대를 노린 것이다. 조선철도는 1930년대 조선공업화정책에 따라 원료자원 운송을 위한 산업선 위주로 확충되었다.[114] 철도가 확충되면서 역 중심의 관광지가 형성되며 관광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창출되었다.[115] 그런데 이러한 관광 진흥의 이면에는 1920년대 후반 경기 침체로 인한 철도 수익률 하락이라는 경제적 어려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이익의 감소를 여객수입증대로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로서 철도박물관이 활용되었다. 관광 활성화로 경제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당시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조선과 만주로 관광의 범위를 확장하며 만주국과 조선총독부와의 연계도 모색했다.[116] 총독부 철도국도 일본의 예를 본보기로 관광과 여행에 관한 전람회 개최 등으로 관광산업을 진작하여 철도 수입을

112) 한승연, 「근대 郵政 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분석」, 『정부학연구』 제12권 1호,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06, 245면.
113) 한국박물관연구회, 「우리나라 체신의 변천」, 『한국의 박물관』 4, 문예마당, 2005, 232면.
114) 김백영, 「여가생활과 관광문화」, 『서울2천년사』 30, 서울역사편찬원, 2015, 414-415면.
115) 성주현, 「철도의 부설과 근대관광의 형성」,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 205-250면.
116) 조성운, 「戰時體制期 日本視察團 硏究」, 『史學硏究』 제88호, 한국사학회, 2009, 1055-1056면; 김백영, 「철도제국주의와 관광식민주의: 제국 일본의 식민지 철도관광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와 역사』 제102집, 한국사회사학회, 2014, 213면.

증대하고자 했다.[117] 이와 같이 철도박물관은 철도로 '근대화된 조선'의 이미지를 각인하는 정신교화적 역할도 수행했지만,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경제난을 타개하고 식민 통치자금 조달하는 등 경제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관광 산업 홍보의 기능이 보다 중요했다.

이상과 같이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에 등장한 6개의 전문박물관은 만주사변 이후 식민지 조선을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재편해 가려는 새로운 체제 속에서 등장한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규정한 박물관의 역할도 변화되었다. 일제 강점 초기 조선의 박물관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여 식민지인의 순응을 유도하는 관념적 역할이 강했다. 반면에 만주사변 이후 전운이 고조되어 가는 1930년대 이후 상황에서 박물관은 역사를 통한 이데올로기 창출과 같은 관념적 효용성보다는 새로운 통치방식이 잘 실행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효용성이 더 중요했다. 조선강점 이전부터 1920년대까지 한반도를 넘어 만주지역까지 실시되던 고적조사와 유적 발굴에 대한 열의가 1930년대 들어 급감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적 효용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118] 물론 1930년대 들어 관념적 지배정책이 약화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촌진흥운동, 정신작흥운동, 심전개발운동, 내선일체 등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경찰참고관 같은 폭압적 전시공간이 이를 증명한다. 다만 1930년대 들어서 우가키 총독의 조선지배정책이 전시준비로 재편됨에 따라 박물관도 이에 맞게 바뀐 것이다. 그래서 박물관은 당시 주요 정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며, 이에 필요한 자본 조성과 경제적 이익 창출 등을 위한 공간으로의 기능이 부가되었다. 이는 박물관의 역할이 관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조선지배에 현실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용성으로까지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전문박물관은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조선통치체제 재편 과정에서 '박물관'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수탈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117) 안창모,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2, 14면.

118)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132면.

5. 맺음말

일제는 조선강점 초기부터 식민지배에 박물관의 유용함을 인식하고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역사계박물관을 설립하였다. 학계에서 일제시기 박물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도 이러한 식민지라는 특수성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박물관 중에는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분야가 바로 비역사계의 전문박물관이다. 이들 박물관은 계획에 그친 것도 많고, 완공되었다고 해도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일부였다.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전문박물관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어 박물관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여러 전문박물관의 설립 논의와 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역사계의 전문박물관은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각 분야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박물관으로 명명되었지만 이들 전문박물관 설립 추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양한 전시공간의 증가 혹은 근대문화의 확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박물관도 표면적으로는 대중의 교양함양과 문화 향유를 표방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민통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실행 기관이었음은 수많은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전문박물관도 효율적인 식민통치라는 기본적 목적은 동일하나, 총독부의 핵심 정책 이행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일본의 독점자본 유치, 간이보험 납입금 증가, 관광업을 통한 철도수익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효용성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이는 우카기 총독 재임기간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 및 병참기지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일제의 조선통치 전략 변화가 박물관에 민감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대부분의 전문박물관은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인 1933년부터 시정25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던 시기에 본격화되었다. 총독부의 각 부서가 동시다발적으로 경쟁적으로 추진하였기에 무리도 따랐다. 그래서 광업박물관과 산업박물관은 유사 성격의 대규모 박물관인 '조선종합박물관'에 통합 흡수되는 식으로 입안 단계에서 사라졌다. 그 외 전문박물관은 시정25주년이라는 총독부 차원

의 기념사업 분위기에 편승해 개관했다. 조선총독부에게 1935년의 '시정25주년'은 단지 연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통치 제2기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시정25주년기념으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종류의 새로운 식민통치수단이 등장하여 조선지배 재편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했다.

이러한 전문박물관은 전시체제기를 대비한 우가키 총독의 핵심 정책인 '내선융화'와 '농공병진'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그렇기에 전문박물관은 기존 역사계박물관과 달리 경제적 효용성과 실용성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더욱 강조했다. 달리 표현하면, 1930년대 들어 박물관의 기능이 더 이상 식민지인의 사상통제라는 관념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식민통치자의 정책 이행, 통치자금 조달 등으로 현실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 부서들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현해야하는 입장이었고, 그 수단으로서 전문박물관을 기획했다. 농림국은 농림박물관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진작시키고자 했고, 식산국은 광업박물관으로 조선공업화정책을 홍보하고 이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려 했다. 체신박물관과 철도박물관도 농공병진 정책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치자금 조달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경제적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전문박물관은 일제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맞춰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지배전략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고, 기존 박물관과는 다른 역할이 부여되었다. 일제 강점 초기의 역사계박물관은 일제의 조선지배 정당성 입증에 주력했다면, 1930년대에 등장한 전문박물관은 재편된 일제의 조선지배 정책을 실행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그중 통치자금 확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일제의 전시체제로의 준비는 식민지 박물관의 성격과 역할까지 바꾸어 놓았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每日申報』, 『博物館硏究』, 『시정30년사』, 『朝鮮』, 『조선중앙일보』, 『朝鮮總督府官報』.

국성하, 『우리 박물관의 역사와 교육』, 혜안, 2007.
_____, 『한국 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 2009.
김경림, 「일제하 조선철도 12년 계획선에 관한 연구」, 『경제사학』 제12호, 경제사학회, 1988, 59-119면.
김백영, 「철도제국주의와 관광식민주의: 제국 일본의 식민지 철도관광에 대한 이론적 검토」, 『사회와 역사』 제102집, 한국사회사학회, 2014, 195-230면.
_____, 「여가생활과 관광문화」, 『서울2천년사』 30, 서울역사편찬원, 2015.
김성용・이재욱, 「해방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찰」, 『자원환경지질』 제48권 1호,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15, 77-88면.
김용달, 「'농촌진흥운동기' 조선농회의 성격 변화」,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296-328면.
김인덕, 『한국박물관 100년사』, 국립중앙박물관, 2009.
_____, 「조선총독부박물관 전시에 대한 소고」,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제학술회의 발표집, 2011년 2월 22일.
_____, 『한국현대사와 박물관 연구』, 국학자료원, 2018.
김정은,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내용과 논리」, 『역사와 현실』 제3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1, 297-332면.
김현정, 「조선총독부 '종합박물관' 구상의 식민성」, 『서울과 역사』 제94호, 서울역사편찬원, 2016, 81-120면.
목수현, 「일제하 박물관의 형성과 그 의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0a.
_____, 「일제하 이왕가박물관의 식민지적 성격」, 『미술사학연구』 제227호, 한국미술사학회, 2000b, 81-104면.
성주현, 「철도의 부설과 근대관광의 형성」, 『시선의 탄생—식민지 조선의 근대관광』, 선인, 2011.
안유림, 「1930년대 총독 宇垣一成의 식민정책」, 『梨大史苑』 제27집, 이화여대 사학회, 1994, 139-177면.
안창모, 「한국근대건축에서 식민지관광주의와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1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2, 7-22면.
오영찬, 「조선고적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한국문화』 제55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223-251면.
윤해동, 『근대역사학의 황혼』, 책과 함께, 2010.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2.
이병례, 「일제하 전시 기술인력 양성정책과 한국인의 대응」,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1.
이상의, 「1930년대 조선총독부 殖産局의 구성과 공업화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0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88-117면.
이성시,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와 총독부박물관」, 『미술자료』 제87호, 국립중앙박물관, 2015,

23-57면.
이순자,「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이순우,『광화문 육조앞길』, 하늘재, 2012.
이윤갑,「우가키 가즈시게 총독의 시국인식과 농촌진흥운동의 변화」,『대구사학』 제87집, 대구사학회, 2007, 33-80면.
이준영,「일제강점기 하야시 시게조(林繁藏)의 조선경제 운영구상과 실행전략」, 동의대 박사학위논문, 2018.
전상숙,「우가키 총독의 내선융화 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 정책」,『현상과 인식』 제34권 4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10, 41-63면.
정안기,「1930년대 조선형특수회사, 조선광업진흥(주)의 연구」, 대한경영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집, 2015년 11월 13일.
정인경,「은사기념과학관과 식민지 과학기술」,『과학기술학연구』 제5권 2호, 한국과학기술학회, 2005, 69-95면.
정태헌,「조선철도에 대한 滿鐵 위탁경영과 총독부 直營으로의 환원 과정 및 배경」,『한국사학보』 제60호, 고려사학회, 2015, 383-424면.
조성운,「戰時體制期 日本 視察團 硏究」,『史學硏究』 제88호, 한국사학회, 2009, 1055-1111면.
지수걸,『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평사, 1993.
최석영,「조선총독부박물관의 출현과 '식민지적 기획'」,『역사와 담론』 제27집, 호서사학회, 1999, 93-125면.
하야시 히로시게, 김성호 옮김,『미나카이백화점』, 논형, 2007.
한국박물관연구회,『한국의 박물관』 4, 문예마당, 2005.
한승연,「근대 郵政 제도의 발전과 사회적 영향 분석」,『정부학연구』 제12권 1호, 고려대 정부학연구소, 2006, 229-262면.

金 玄,「植民地朝鮮と多木久米次郎: 朝鮮における事業基盤と参政権問題」,『海港都市硏究』 第4号, 神戸大学文学部海港都市硏究センター, 2009.
大出尙子,「日本の旧植民地における歷史・考古学系博物館の持つ政治性」,『東洋文化硏究』 第14号, 学習院大学東洋文化硏究所, 2012.

「일제시기 건축도면 콘텐츠」,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place/viewMain.do(2020. 9. 30. 검색).

【Abstract】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Museums in the 1930s in the Context of Ugaki Kazushige's Governance on the Colonized Korea

Kim, Hyun-Jung*

It is well known that Imperial Japan made use of museums as a means of colonial rule from the beginning of Korea's occupation. So far most of museum studies on Colonized Korea have been focused on the Museum of Chosen Governor-General and its branches in several historical cities. Contrast to this tendency, conception and establishment of Specialized Museums were rarely known and barely investigated. So, in this study, author gathers most of available information—included newspaper, propaganda leaflets and archives—and tries to reconstruct how these forgotten museums were planned and established. Subsequently, author found that the planning and establishment has deeply concerned with the new policy of governor-general Ugaki Kazushige (宇垣一成), who took office in 1931.

Officially, these Specialized Museums were motivated and closely related to Japan's project to commemorate the 25th anniversary of Korea's colonial rule in 1935. Although these are named as 'Museum', their function was far from real museum activities. These were used for changed colonial policy in terms of Manchuria expansion of Imperial Japan, promoted by Governor-General Ugaki Kazushige's governance. And some of exhibition hall were reused to attract colony fund.

Generally, colonial museums were built to educate colonial people and intend to make them faithful to colony governance. However, the Specialized Museum has not only played such a role, but also a new role in propagandizing their expansion to Manchuria and securing funds for colonial rule. Like this, specialized museums were nothing but a new institution to take more resources and funds from Chosen.

Keywords: Specialized Museum, Japanese Colonial Period, Agriculture Museum, Mining

*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Museum, Industrial Museum, Police Museum, Postal Museum, Railway Museum, Chosen Industrialization, Governor-General Ugaki Kazushige, Commemorate the 25th Anniversary of Korea's Colonial Rule.

접수일: 2020.09.30. || 심사일: 2020.10.07. || 게재확정일: 2020.11.16.